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김 두 섭**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성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출산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핵심단어: IMF 외환위기, 차별출산력, 제2차 출산력변천, 인구변천, 초저출산, 출산력 저하

I. 머리말

한국 정부는 2004년 출산장려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을 선언하고, 다양한 정책적인 시안들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최근에는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2조 원을 투입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공표되었다(보건복지부, 2006).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8-BS0004). 이 논문은 2006년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그런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은 과거의 출산억제정책에 비해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산장려를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도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Gauthier and Hatzius, 1997; Héran, 2005). 특히, 출산장려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은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출산장려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입안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출산력 저하의 인과구조와 결정요인, 그리고 특정한 사회경제적 사건이나 환경변화의 효과에 관해서 세밀한 분석과 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의 출산수준 저하가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상승 등 노동시장 불안정에 기인하는 바 크다면, 출산장려정책의 초점은 청년인구의 고용증대를 통해 이들이 빨리 결혼하고 출산하도록 유인하는데 우선적으로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의 구체적인 대상집단을 설정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해당 집단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출산력 변화의 추세와 그 인과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전제로 한다.

한국의 인구증가와 출산력의 저하에 관해서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초저출산 수준으로의 저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출산력 저하의 본질과 이론적 근거를 규명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Eun, 2003; Jun, 2004; Kim, 2005; 김두섭, 2005; 김태현 외, 2006; 유삼현, 2006; 이성용, 2006).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대 이후 출산력의 변화추세와 패턴을 고찰하고, IMF 외환위기가 한국사회의 출산수준 및 인과구조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대하여 거시적인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시분석에서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출산력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첫째,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에서 20-49세 기혼 여자들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가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조직적으로 다른 인과구조를 지니는가를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결혼시기에 관계없이) 재혼한 여자들의 집단과 1997년 및 그 이후 처음 결혼한 여자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 두 집단의 출산력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

대로 장래 인구정책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시도하였다.

II.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관련 지표의 변화

지난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로 인한 IMF로부터의 구제금융이 세계화의 물결과 맞물려 한국사회의 각 부문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선,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한국 시장이 외국에 전면 개방되었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장년층의 명예퇴직이 증가하여 평생직장과 정년퇴직의 개념이 약화되었고, 수많은 가계를 빈곤과 파탄으로 이끌었다. 청년실업 역시 급속히 증가하여 직업의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아울러 높은 실업률의 타개, 기업의 노동생산성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노동유연화 정책의 채택은 비정규직 취업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비록 그 후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경기침체는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김두섭·송유진, 2006; 통계청, 2006a; 한국은행, 2006; IMF, 2006). IMF 외환위기와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한국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출산력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IMF 외환위기는 취업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임금근로자의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즉 1997-1998년 기간에 상용근로자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그 파급효과는 여자 취업자에게서 더욱 심각하였다. 남자의 경우에는 생산직, 여자는 서비스, 판매와 사무직에서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전문관리직 화이트칼라들의 취업자 규모에 미친 영향은 남녀의 구분 없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김두섭·송유진, 2006). IMF 외환위기는 고용불안정 이외에도 근로빈곤계층을 증가시키고 사회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중산층이 감소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근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빈곤율은 별로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거나, 또는 고용이 불안정하여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김두섭·송유진, 2006; 통계청, 2006a; 한국은행, 2006; IMF, 2006).

IMF 외환위기의 후유증은 경제부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사회의 모든 부문에 심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대량 실업, 노동시장의 왜

곡, 빈곤 증대 등의 현상은 이혼, 기출, 가족 유기, 가족 폭력 등 가족의 불안정성과 가족 해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출산수준 역시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통계청(2006b)의 2005년 출생신고 집계결과에 의하면 출생아수는 43.8만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4년보다 3.8만 명(-7.9%)이 감소한 것이며, 1997년 67.8만 명의 64.6%에 해당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합계출산율은 1997년의 1.54에서 2004년 1.16, 그리고 2005년에는 1.08을 기록하였다. 미국의 인구조회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06)이 발표한 2005년 세계인구자료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1.0)과 마카오(0.8)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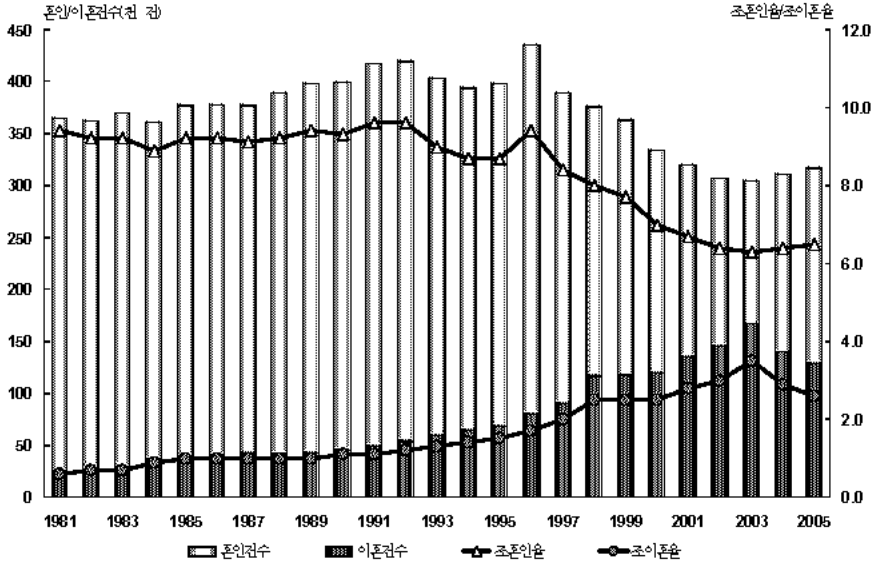
IMF 이후의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특히 20대 젊은이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한 것은 이러한 요인에 기인한바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출산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몇몇 지표들을 선택하여, 이들이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의 <그림 1>에서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은 1996년 각각 43.5만 건과 9.4%를 기록한 후에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1997년에는 전년도 대비 혼인건수의 증감률이 -10.7%를 기록하였으며, 조혼인율도 큰 폭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1997년을 계기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2003년까지 계속되었다. 전년도 대비 이혼건수의 증감률은 1997년 14.1%, 1998년 28.0%로 집계되었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대량 실업과 빈곤 증대가 가족의 해체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을 보면,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2003년을 계기로 감소하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2005년에 각각 12.8만 건과 2.6%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조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통계청, 2006a).

한국에서는 혼외출산의 구성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초혼연령, 특히 여자의 초혼연령은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과 함께 출산수준을 결정지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국 여자의 평균초혼연령(SMAM)은 1997년에 25.7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평균초혼연령은 1997년 이후 매년 0.2-0.3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에는 27.7세에 도달하였다(통계청, 2006a).

초혼연령의 상승은 첫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첫째아의 평균 출산연령이 1997년 26.9세였으나 2005년에는 29.1세로 높아졌다. 같

<그림 1> 혼인건수, 이혼건수,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의 변화추세, 1981-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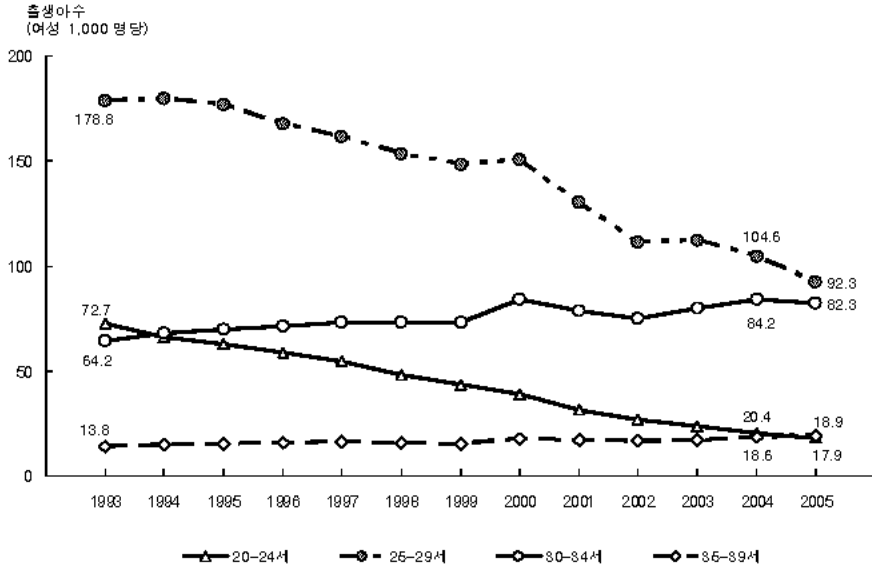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6c)

은 기간에 둘째아의 평균 출산연령은 29.1세에서 31.0세로 상승하였다. 또한 <그림 2>를 보면, 20대 여자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29세 연령층의 1천 명당 출산율이 1997년에 161.5‰이었으나, 1998년 153.4‰, 1999년에 148.1‰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05년에는 92.3‰로 집계되었다. IMF 외환위기의 파급효과가 가장 심했던 불과 2년 동안에 주 출산연령층에서 8.3%, 그리고 2005년까지 42.9%의 출산 감소가 이루어진 것이다(통계청, 2006b).

<그림 2>에서 20-24세 집단의 출산율은 1994년을 계기로 30-34세 집단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2005년에 이르면 35-39세 집단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30대 여자의 출산율이 약간이나마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2005년에 이르면 주 출산연령층이 25-29세 집단에서 30-34세 집단으로 바뀌게 된다. 참고로, 2005년에 태어난 출생아의 40.9%가 30-34세의 부인에게서 태어났고, 40.2%가 25-29세의 부인에게서 태어났다(통계청, 2006b).

주 출산연령층의 이 같은 교체현상은 결국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

〈그림 2〉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추세, 1993-2005



자료: 통계청(2006b)

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실업증가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바 큰 것으로 판단된다. IMF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이후 20-30대 남녀인구의 실업률이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특히, 25-29세 남자의 실업률은 1997년 4.9%에서 1998년 10.9%로 가장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에는 25-29세 여자의 실업률도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였다(OECD, 2004; 김두섭, 2005; Kim, 2005). 이 연령층 여자인구의 상당 부분이 실업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실업률은 1999년 이후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직도 IMF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노동시간, 임금 등을 감안할 때, 젊은이들의 고용 안정성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실정이다.

이처럼, 출산과 관련되는 모든 지표들이 1997년부터의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하게 변화한 것으로 관찰된다.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결혼과 출산을 연기

하거나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출산억제의 효과는 장년층에게도 마찬가지로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Ⅲ. 미시분석 자료와 분석대상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1997년의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과연 출산력의 양상이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KNFS)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첫째,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에서 20-49세의 기혼 여자만을 추출한 다음, 이들이 출산한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값들이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조직적으로 변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만약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출산력의 인과구조에 변화가 초래되었다면,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의 인과구조는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였다.

둘째,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에서 20-49세의 기혼 여자만을 추출한 다음, 추출된 사례들을 두 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누었다. 즉,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결혼시기에 관계없이) 재혼한 여자들의 집단과 1997년 및 그 이후 처음 결혼한 여자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집단의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1>에는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 관한 주요 인구학적 특성들이 제시되어 있

<표 1>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에서 추출된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20-49세 기혼 여자					
	1997년 이전 결혼+재혼		1997년 이후 초혼		전체	
	평균값	N	평균값	N	평균값	N
부인의 총출생아수(OEB)	2.1	5,164	1.1	1,359	1.9	6,525
부인의 1998년 이후 출생아수	0.2	5,301	1.1	1,359	0.4	6,660
남편의 평균 연령	43.2	5,299	32.3	1,359	41.0	6,660
부인의 평균 연령	39.8	5,299	29.4	1,359	37.7	6,660
남편의 평균 결혼연령	27.2	5,287	28.9	1,358	27.5	6,645
부인의 평균 결혼연령	23.8	5,261	25.9	1,359	24.2	6,620
결혼과 첫 출산의 간격(개월)	17.3	5,150	18.2	1,358	17.5	6,50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20-49세 기혼 여자의 평균 총출생아수는 1.9명이다. 이 중에는 1998년 이후의 평균 출생아수 0.4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분석대상을 결혼시기와 초혼 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면, 첫 번째 집단(1997년 이전 결혼 또는 재혼자)과 두 번째 집단(1997년 이후 초혼자)의 총출생아수는 각각 2.1명과 1.1명이 된다. 부부의 평균 연령은 두 집단에서 10세 전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편과 부인의 결혼연령을 비교해보면, 두 번째 집단에서 각각 1.7세와 2.1세가 높다. 결혼과 첫 출산 사이의 평균 간격도 두 번째 집단에서 18.2개월로 산출되어, 첫 번째 집단의 17.3개월보다 약간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는 이 두 집단의 교육수준과 직업의 분포를 보여준다. 우선,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두 번째 집단은 연령이 낮은 만큼 교육수준이 현저하게 더 높다. 대학교육을 받은 남편과 아내의 구성비가 각각 53.3%와 46.3%에 이른다. 반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닌 남편과 아내는 각각 3.3%와 3.0%에 불과하다. 이는 첫 번째 집단의 구성비 21.7%와 27.8%에 비해 월등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 두 집단은 교육수준의 분포가 다른 만큼 직업의 분포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두 번째 집단에서는 남편이 사무직 종사자인 경우가 22.4%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기술 및 준전문가 16.8%, 기능 관련직 13.8%의 순이다. 이에 비해 첫 번째 집단에서는 장치 및 기계조작 16.1%, 기능직 15.2%로 블루칼라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두 번째 집단에서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의 구성비가 아주 낮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아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아내의 직업은 두 번째 집단에서는 사무직이 33.1%로 가장 많고, 전문가 15.9%, 판매직 14.5%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첫 번째 집단(1997년 이전 결혼+재혼)에서는 판매직 21.6%, 서비스직 18.1%, 단순노무직 14.7%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IV.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 출생아수의 분석

그러면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에서 추출한 20-49세의 기혼 여자 6,66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출산한 출생아의 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가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조직적으로 변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런데 출산수준이 높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비교분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20-49세의 기혼 여자의 평균 총

<표 2> 결혼시기와 초혼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교육수준과 직업 분포

	20-49세 기혼 여자					
	1997년 이전 결혼 + 재혼		1997년 이후 초혼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남편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461	8.7	9	0.6	449	6.9
중학교 졸업	689	13.0	36	2.7	699	10.7
고등학교 졸업	2,190	41.4	589	43.4	2,714	41.6
대학교	454	8.6	255	18.8	703	10.8
대학교 졸업	1,500	28.3	468	34.5	1,953	30.0
합계	5,294	100.0	1,357	100.0	6,518	100.0
부인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579	10.9	9	0.6	571	8.8
중학교 졸업	892	16.9	32	2.4	874	13.4
고등학교 졸업	2,637	49.8	688	50.7	3,270	50.2
대학교	323	6.1	280	20.6	598	9.2
대학교 졸업	862	16.3	349	25.7	1,205	18.5
합계	5,293	100.0	1,358	100.0	6,518	100.0
남편의 직업						
고위일직원/관리자	199	3.9	14	1.1	210	3.4
전문가	402	8.0	106	8.1	507	8.1
기술/준전문가	444	8.8	220	16.8	660	10.6
사무	654	12.9	293	22.4	945	15.1
서비스	325	6.4	105	8.0	418	6.7
판매	610	12.1	139	10.6	735	11.8
기능	769	15.2	180	13.8	912	14.6
장치/기계조작	814	16.1	175	13.4	966	15.5
단순노무	332	6.6	50	3.8	369	5.9
농어업	506	10.0	27	2.1	517	8.3
합계	5,055	100.0	1,309	100.0	6,239	100.0
부인의 직업						
고위일직원/관리자	19	0.6	0	0.0	19	0.6
전문가	199	6.7	80	15.9	279	8.3
기술/준전문가	162	5.5	68	13.5	228	6.7
사무	226	7.7	166	33.1	389	11.5
서비스	534	18.1	62	12.4	566	16.7
판매	638	21.6	73	14.5	701	20.7
기능	131	4.4	9	1.8	138	4.1
장치/기계조작	214	7.3	13	2.6	226	6.7
단순노무	433	14.7	20	4.0	439	13.0
농어업	395	13.4	11	2.2	396	11.7
합계	2,951	100.0	502	100.0	3,381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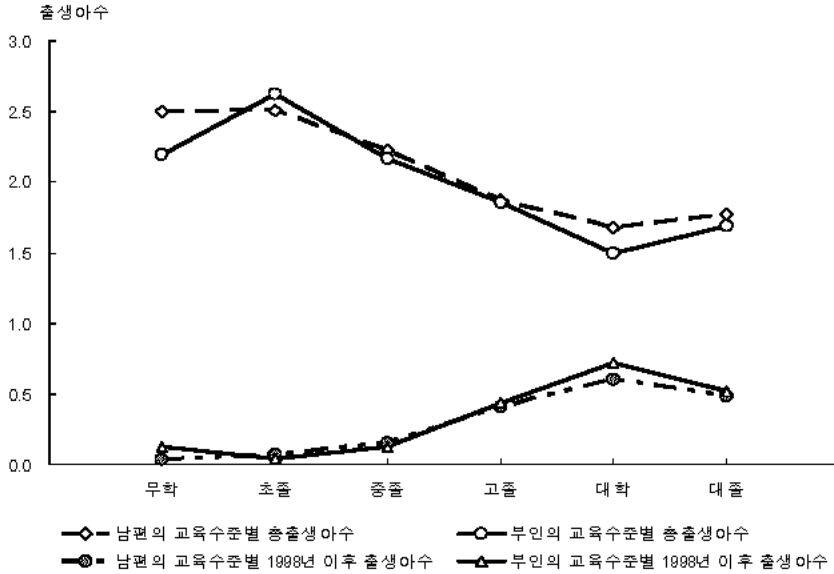
출생아수는 1.9명이다. 특히, 1998년 이후 출생아수의 평균값은 0.4명에 불과하다.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종속변수의 값들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편차와 분산(variance)도 매우 작아지고, 인과구조의 규칙성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성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의 규칙성, 또는 그 실마리를 찾아낸다면 이 논문의 주장은 크게 강화될 수 있다.

<그림 3>에서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 출생아수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총출생아수는 감소하나, 대학을 졸업한 부부들은 바로 아래의 집단보다 총출생아수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이 그림에서 부인이 무학자일 때 초등학교 졸업자보다 총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불과 36명에 기초하여 산출되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림 3>에서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는 부부의 교육수준과 전혀 다른 관계의 양상을 보인다.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도 증가하다가, 대학졸업자에 이르러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결국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행위를 가장 민감하게 변화시킨 집단은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부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교육수준이 낮거나 하층 집단에 속한 부부들에게 자녀수를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절실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그림 3>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부부들도 바로 아래의 학력집단에 비해서 보다 민감하게 출산수준이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학력이 높거나 수입이 많은 부부들의 경우에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양육비에 대한 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3>은 만약 현재의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교육과 출산력의 관계의 전반적인 양상이 앞으로 크게 달라지리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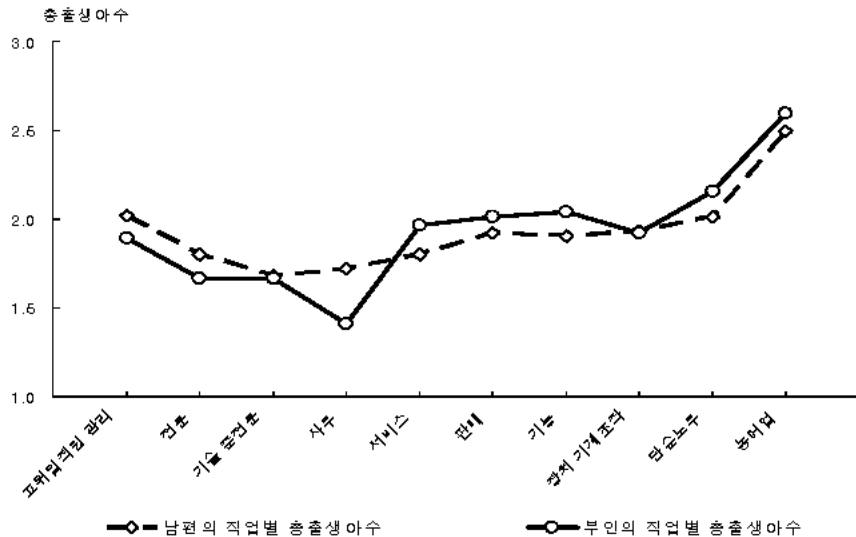
이 같은 차별출산력의 양상은 부부의 직업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 감지된다. <그림 4>를 보면, 농어업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부부의 순으로 총출생아수가 가장 크며, 대체로 직업위세가 높아질수록 총출생아수가 작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은 바로 아래의 계층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부인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출생아수가 뚜렷하게 낮게 나타났다.

<그림 3> 부부의 교육수준별 총출생아수 및 1998년 이후 출생아수,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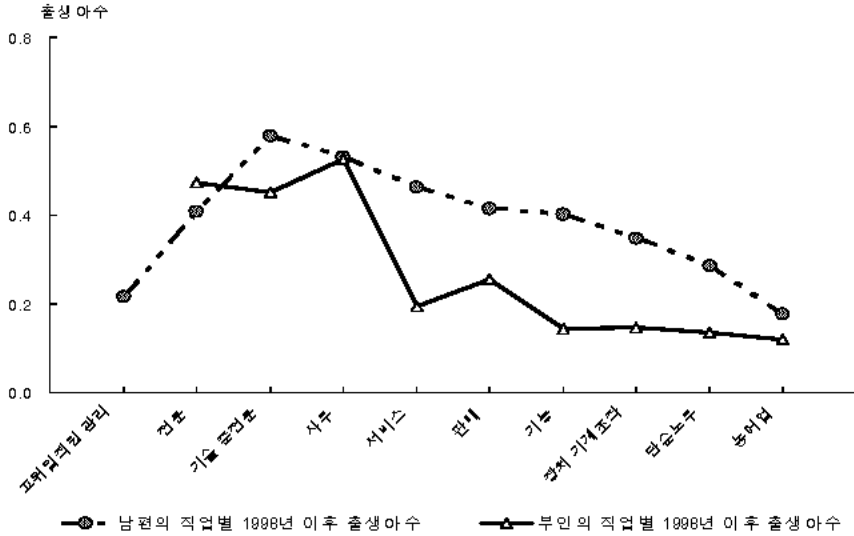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그림 4> 부부의 직업별 총출생아수,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그림 5> 부부의 직업별 1998년 이후 출생아수,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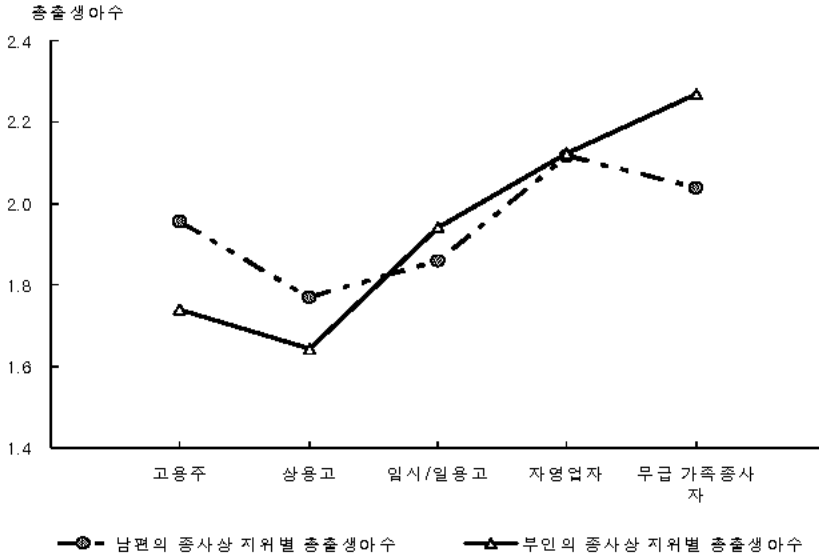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그런데 <그림 5>에 제시된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는 총출생아수와 전혀 다른 관계의 양상을 나타낸다. <그림 5>에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행위를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시킨 집단은, 농어업과 단순노무직처럼 직업위세가 낮은 직종, 그리고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과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부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출산수준이 비교적 높았던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직에 종사하던 부인들의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떨어졌음을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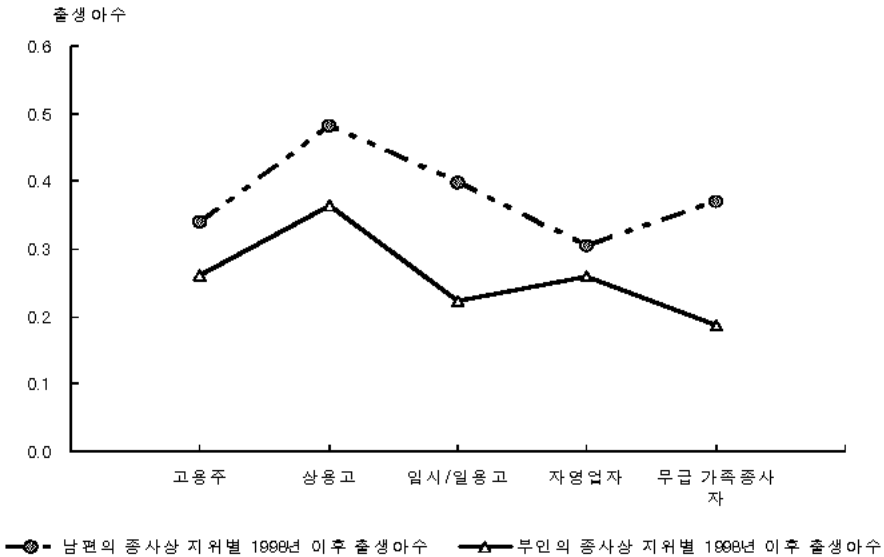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행위의 변화는 부부의 종사상 지위별 출생아수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감지된다. 여기서 <그림 6>의 x축에 제시된 종사상 지위의 순서가 지위 위세나 계층적 서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자. 만약 이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이 그림에 제시된 관계의 양상은 직업에 따른 출산수준의 형태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그리고 <그림 7>에서 부부의 종사상 지위와 1998년 이후 출생아수의 관계의 양상 역시 <그림 5>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6>과 <그림 7>에서 다소 의외의 출산수준을 보이는 무급 가족종사자 남편의 수는 각각 26명과 27명에 불과

<그림 6> 부부의 종사상 지위별 총출생아수,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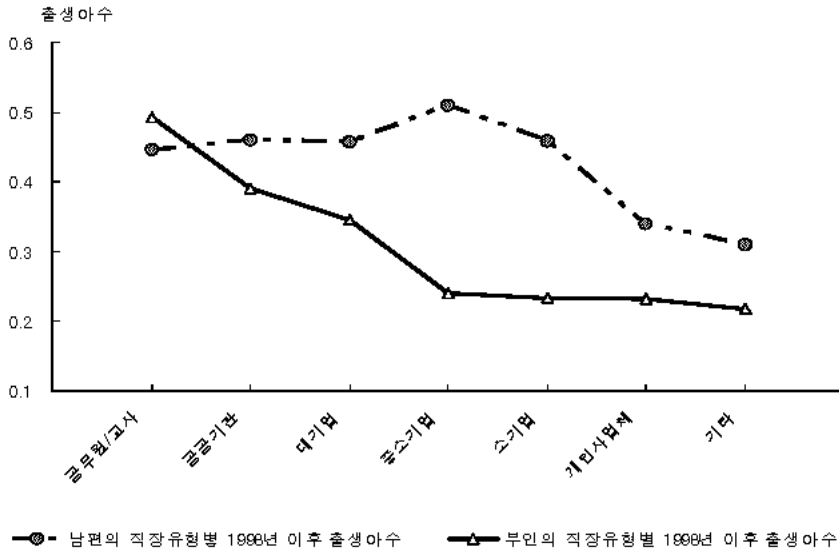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그림 7> 부부의 종사상 지위별 1998년 이후 출생아수,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그림 8〉 부부의 현재 직장유형별 1998년 이후 출생아수,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하다.

결국, 〈그림 6〉과 〈그림 7〉에서도 종사상 지위의 위세가 낮고 출산수준이 가장 높았던 집단의 출생아수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이 감소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위 위세나 서열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고용주의 출산수준이 현저하게 저하하였다. 즉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교육, 직업,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별출산력 분석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속성이 두드러지게 구분됨이 없이 출산력과 일관된 관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그림 8〉에 제시된 직장유형별 1998년 이후 출생아수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 최근의 출산수준은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부인의 순서로 높고, 직장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높은 실업률과 구조조정으로 불안감이 높은 노동시장에서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이 가장 안정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직장으로

간주되는 최근의 상황이 출산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직장규모와 최근의 출산수준이 반비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직장유형에 따른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소기업 종사자가 가장 높았으며,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민감한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개인사업체 종사자의 최근 출산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이들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출산력은 인구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최근 가용한 소득 정보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출산력조사(World Fertility Survey)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1974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에는 소득효과에 관한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체계적인 분석결과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림 9>와 <그림 10>에 제시된 바, 가구총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른 출생아수의 편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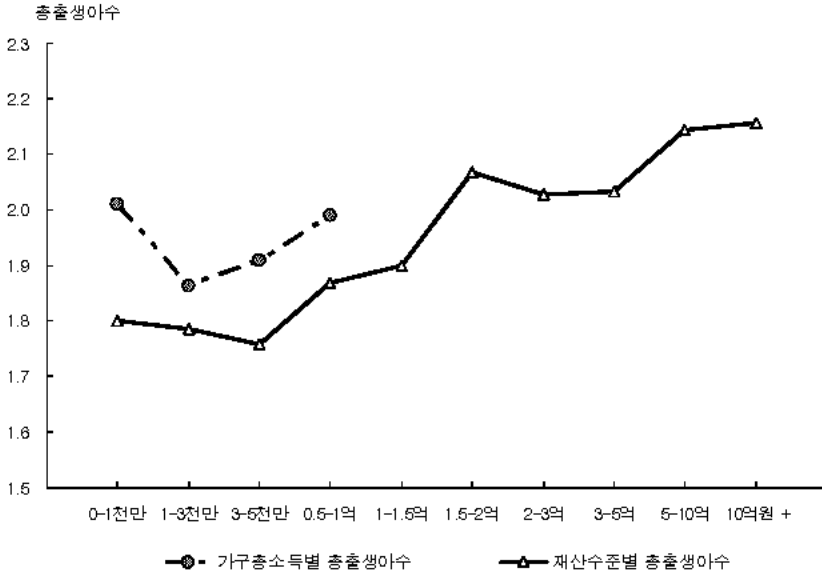
<그림 9>에서 가구총소득과 출산수준은 V자형의 관계를 나타낸다. 즉, 낮은 소득수준에서는 소득의 증가와 함께 출산수준이 낮아지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 서면 양자는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 만약 소득을 보다 여러 개의 범주로 나눈다면, 이 관계는 U자형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9>에 제시된 재산수준은 가구총소득의 누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변수는 동산과 부동산을 합해서 측정하였으며, 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 그림에서는 재산수준도 가구총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관계의 굴곡이 매우 낮고 완만하여, 이를 정적인 직선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지닌다.

그런데 <그림 10>에 제시된 1998년 이후 출생아수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형태가 부부의 교육, 직업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석결과와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에 나타난 관계의 양상이 <그림 5> 및 <그림 7>에서의 매우 유사하지만, x축의 재산수준 서열이 앞의 두 그림에서와는 반대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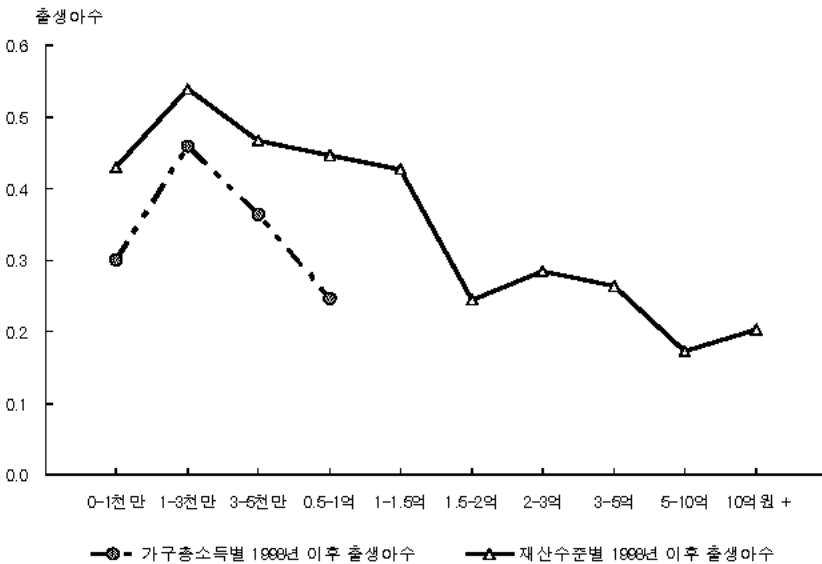
1) 최근에 이르러 남녀 모두 안정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이 배우자 선호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녀의 이상적 배우자감 순위는 남자의 경우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교사·금융업 종사자 일반 사무직, 여성은 교사·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일반 사무직·금융업 종사자의 순이다(동아일보, 2006).

<그림 9> 가구총소득과 재산수준별 총출생아수,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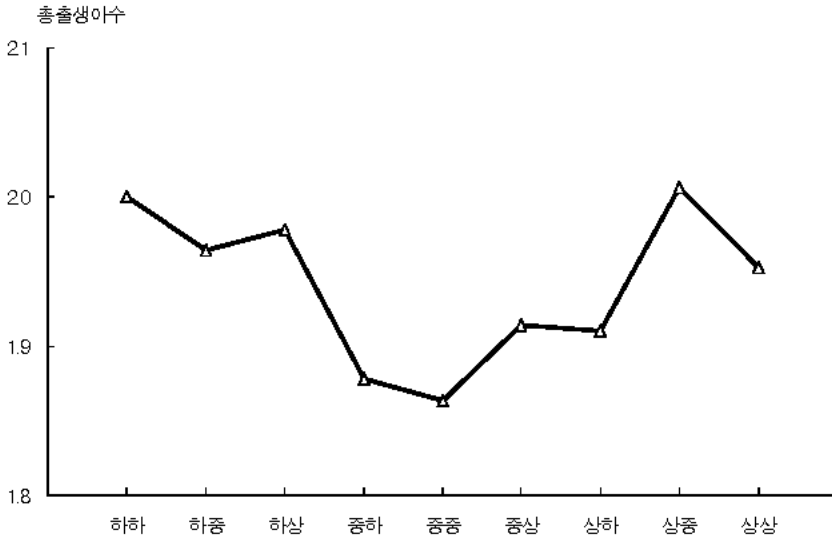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그림 10> 가구총소득과 재산수준별 1998년 이후 출생아수,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그림 11> 주관적 계층에 따른 총출생아수,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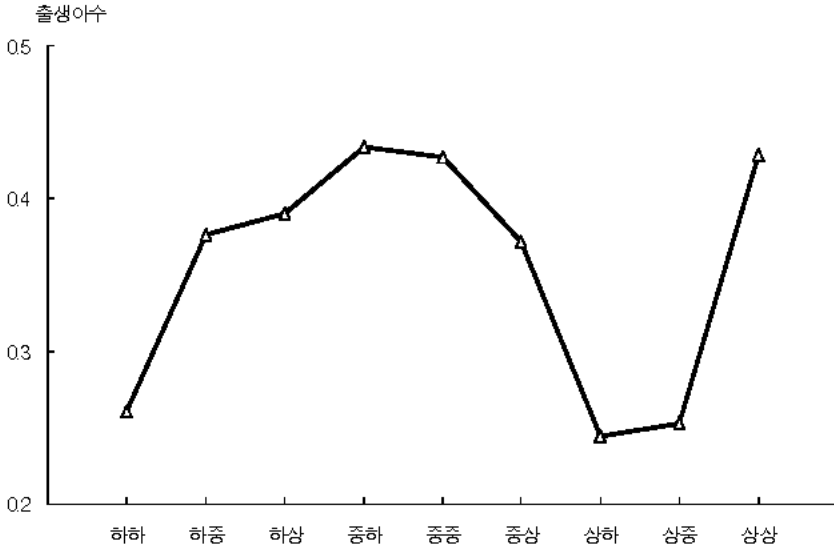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재산변수가 오른쪽으로 길게 편포(skewness) 형태를 나타내는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분석에서 소득이나 재산 관련 변수들에 흔히 적용하는 것처럼, <그림 9>과 <그림 10>의 x축 재산변수에 대수(log) 또는 자연대수(ln)의 값을 취하여 변환시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관계의 형태는 부부의 교육, 직업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석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출산력에 관한 미시경제이론들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Blake, 1968; 권태환·김두섭, 2002). 그런데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조건 못지않게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주관적 계층에 따른 출생아수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 주관적 계층이란 조사응답자가 자신이 속한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계층을 의미한다.

<그림 11>에서 주관적 계층에 따른 총출생아수는 대체로 완만한 V자형 또는 U자형의 양상을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상상 계층은 바로 밑의 상중 계층보다 총출생아수가 약간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스스로 상상 계층에 속한다고

〈그림 12〉 주관적 계층에 따른 1998년 이후 출생아수,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응답한 사람이 21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곤란하다.

〈그림 11〉에서 관찰되는 관계를 좌우대칭형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비슷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상, 상중, 상하의 세 계층을 모두 합하여도 265명으로, 전체에 대한 구성비는 4.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그림에 나타난 관계의 형태가 오히려 뒤집어진 J자형에 가깝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림 12〉에서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의 출산수준은 독특한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계층 구성에 대한 위의 설명들이 이 그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그림 x축에서 주관적 계층을 규모에 따라 표준화시키면, 관계의 형태가 부부의 교육, 직업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석결과와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즉 〈그림 3〉, 〈그림 5〉와 〈그림 7〉에서 보는 것처럼, 계층이 높아질수록 출산수준이 완만하게 높아지다가, 상층에 이르러 다소 낮아지는 양상으로 바뀌게 된다.

V. 결혼시기와 초혼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비교분석

이 연구에서 IMF 외환위기가 출산행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두 번째의 시도는 분석대상을 두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에서 20-49세의 기혼 여자만을 추출한 다음,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결혼시기에 관계없이) 재혼한 여자들의 집단과 1997년 및 그 이후 처음 결혼한 여자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집단에는 5,301명, 그리고 두 번째 집단에는 1,359명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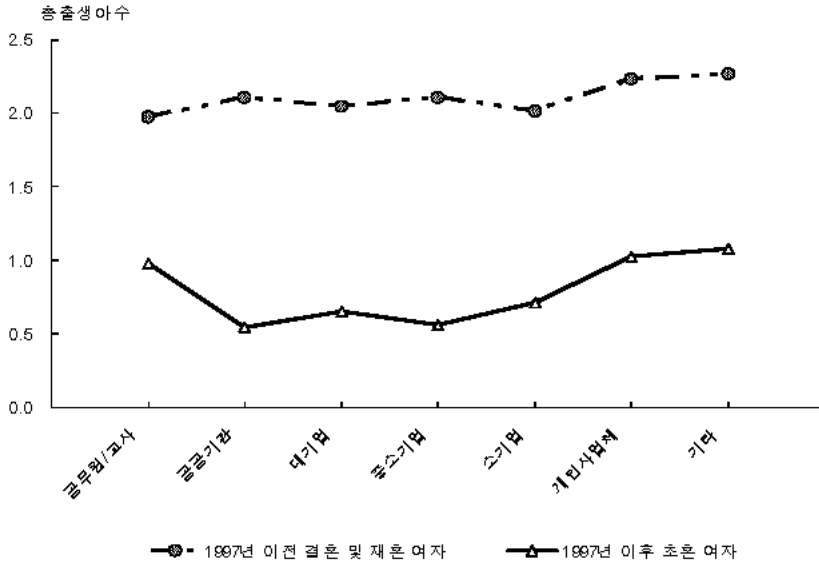
첫 번째 집단은 추출된 20-49세 기혼 여자 중에서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집단은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자로 구성되며, 비교집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의 출산수준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의 출산행위를 주로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의 총출생아수에는 1998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평균값은 0.2명에 불과하다. 첫 번째 집단의 평균 총출생아수는 2.1명으로 집계되었다(<표 1>).

그런데 1997년 이후의 초혼자로 구성된 두 번째 집단은 연령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어서 매우 동질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두 번째 집단은 남편의 76.2%와 부인의 85.6%가 25-34세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저학력자가 매우 적고, 직업분포에 있어서도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농어업 종사자 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의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재산이 아주 많거나 상위 계층에 속한다는 정체성의 소유자, 그리고 고용주의 빈도가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집단의 이러한 특성은 첫 번째 집단과의 비교분석에 있어서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두 번째 집단에서 관찰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총출생아수의 형태는, 앞에서 살펴본 바 1998년 이후 출생아수의 형태와 매우 유사할 수밖에 없다. 양자가 모두 1997-2003년 기간의 출산행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두 번째 집단의 분석결과가 1998년 이후 출생아수의 분석결과와 매우 유사하여 추가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그림의 제시를 생략하였다.

<그림 13>에는 부인의 현재 직장유형에 따른 두 집단의 총출생아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집단은 직장유형에 따라 출산수준에 의미 있는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초혼자 집단에서는 부인이 공무원이

<그림 13> 부인의 현재 직장유형별 두 집단의 총출생아수,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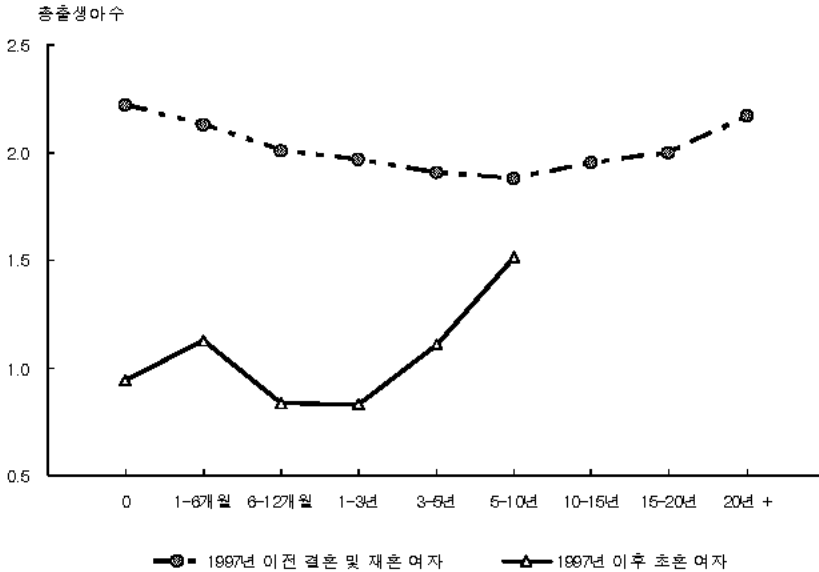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나 교사일 때 다른 직장 종사자들보다 출산수준이 뚜렷하게 더 높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8>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 이들 직장의 안정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과 교사는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경기침체나 구조조정의 영향을 덜 받는 직업으로 널리 인정된다. 그리고 다른 직업에 비해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상대적으로 적고, 출산휴직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 그림이 <그림 8>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부인들의 총출생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두 그림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는 부인들은 최근의 출산수준이 낮지만, 이러한 경향은 1997년 이후 결혼한 초혼 부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타 범주의 경우에는 12명만이 해당되므로 두 그림에서의 일관성 결여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출산력 분석에 있어서 부인의 혼인 후 취업기간은 경제활동 여부, 직업, 직장 유형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부인의 혼인 후 취업기간은 출생아수의 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원인변수가 되고, 또한 출생아수에 의해 결정

<그림 14> 부인의 혼인 후 취업기간별 두 집단의 총출생아수,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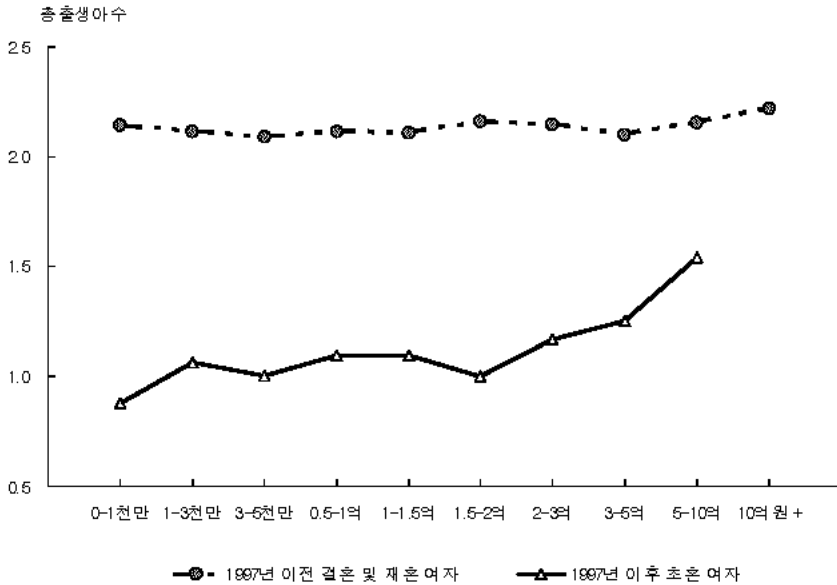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지어지는 결과변수가 된다. <그림 14>에서 부인의 혼인 후 취업기간과 출산수준은 완만한 U자형의 형태를 나타낸다. 부인의 취업은 임신을 지연 또는 회피시켜 출산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에서는 부인의 경제활동 기간과 자녀수가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였다(김두섭, 1986; Kim, 1986). 취업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출산수준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은 인과관계를 반대로 설정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해진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추가 소득을 위해 일을 계속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김두섭, 1986). 최근에는 젊은 세대의 부인들이 자아실현이나 자기성취를 위한 목적 못지않게 자녀의 양육비와 사교육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취업기간이 출산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부인의 연령효과에 기인한다. 즉, 취업기간이 긴 부인일수록 연령이 높을 개연성이 커지며, 이에 따라 총출생아수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14>의 두 곡선에서 굴곡의 경사도와 깊이가 두 번째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 집단에서 취업기간과 출산수준이 주고받는 영향력이 더 강하

<그림 15> 재산수준별 두 집단의 총출생아수,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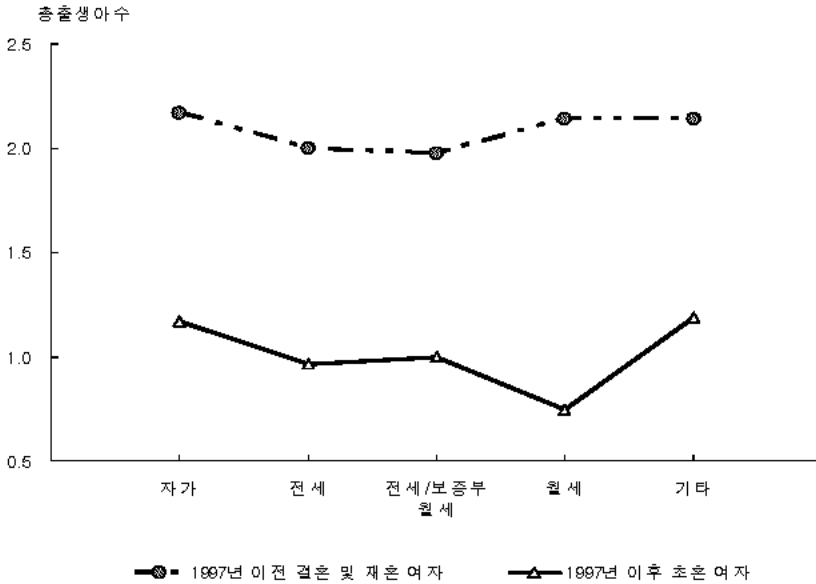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997년 이후 초혼자 집단에서 1-6개월 동안 단기 취업한 부인들의 출산수준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상당수가 혼인 직후 임신이나 출산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는 경향과 관계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출산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1997년 이후 초혼자 집단에서는 재산수준이 총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감지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그림 15>에서 분석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첫 번째 집단은 뚜렷한 관계의 양상을 드러내지 않는 반면, 두 번째의 1997년 이후 초혼자 집단에서는 재산수준이 높아질수록 총출생아수가 커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1997년 이후 초혼자 집단이 <그림 10>의 1998년 이후 출생아수보다는 <그림 9>에 제시된 총출생아수에 근접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추가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림 15>의 1997년 이후 초혼자 집단에서 관찰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즉, 총출생아수는 재산수준이 2억 원 정도에 이를 때까지 별 변화가 없으며, 재산이 이 임계수준

<그림 16> 주택의 소유형태별 두 집단의 총출생아수,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을 넘어설 때 비로소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임계 수준을 넘는 재산의 소유자는 대부분 주택을 소유한 부부들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관찰되는 관계가 주택을 소유한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 출생아수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지닌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재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택의 소유형태별 출산수준은 <그림 15>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림 16>에서 첫 번째 집단의 경우, 자가 범주에서 총출생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른 출산수준의 편차는 그리 뚜렷하지 않다. 이에 비해 1997년 이후 초혼자 집단의 총출생아수는 자가와 기타 범주에서 현저하게 높고, 월세 범주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기타 범주에는 부모 세대와 동거하는 부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비록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에 관련되는 이들의 사고, 가치관과 행위는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부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출산에 대한 부모 세대로부터의 압력과 자녀 양육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이러한 부부들은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적어

진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두 번째 집단에서 주택의 소유형태 조건과 출산 수준은 대체로 부의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VI. 맺는 말

현재 한국 정부는 합계출산율을 OECD의 평균인 1.6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출산장려정책의 초점은 주로 출산비용과 자녀양육비의 지원, 육아시설의 확충, 자녀수에 따른 세금감면 등을 통해 자녀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맞추어지고 있다.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여성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은,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과 근로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양성평등을 강화하며,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성고용정책의 구체적인 초점은 육아시설의 확충, 산전후 휴가 및 급여지원의 확대, 그리고 여성 근로자에게 신축적인 근로시간과 단기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맞추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이러한 정책들이 자녀양육의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며, 따라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한국사회의 출산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출산보조금을 비롯한 직접적 경제지원정책의 일부는 그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이미 확인된바 있다. 자녀양육시설의 확충과 경제적 지원이 출산력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도 그 투자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Gauthier and Hatzius, 1997; Héran, 2005).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한국 출산력의 변화과정에 대한 정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입안되고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정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은 각 나라가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3년 프랑스가 가족과 육아보조를 위해 564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합계출산율 0.1-0.2 정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두었

다고 해서(Héran, 2005),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한국에 프랑스식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²⁾. 특히, 한국에서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복지재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 배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출산장려정책은 해당 사회의 출산력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아울러 사회변동과의 연관성에 관한 종합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정된 가용재원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각종 처방책에 분산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지양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의 출산수준 저하는 IMF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상승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20대 청년인구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데 기인하는 바 크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인구가 빨리 결혼하고 출산하도록 유인하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최근의 출산력 저하가 사회경제적 조건이 가장 열악한 집단과 최상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일어났다는 사실 또한 정책적인 함의를 지닌다. 출산증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각각의 적용대상이 되는 집단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최근의 출산력 저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1990년대 이후의 출산력변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IMF 외환위기가 한국사회의 출산수준과 그 인과구조에 미친 파급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초저출산의 인과구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인과구조를 규명함으로써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과 그 적용대상집단(target group)에 관한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이 논문은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소득, 직업, 경제활동상태, 거주지, 계층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만약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출산력의 인과구조에 변화가 초래되었다면,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의 인과구조는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

2) 최근 프랑스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의 투자효율성과 재원배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 1997년 및 그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 두 집단의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두 집단의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연구의 미시분석에서 발견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자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학원 졸업자 등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의 출산수준이 가장 낮고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가장 높으며, 직업위세가 높아질수록 출산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고위임직원과 전문기술직,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는 사무직 종사자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별출산력은 무급 가족종사자의 출산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영업자, 고용주, 임금근로자의 순이었다. 또한, 가구총소득과 출산수준 간에는 V자형의 관계가 발견되었다. 즉, 낮은 소득수준에서는 소득의 증가와 함께 출산수준이 낮아지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양자는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주관적 계층에 따른 출산수준 역시 대체로 완만한 V자 또는 U자의 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최근의 출산수준(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은 위에 언급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최근 출산수준이 가장 현저하게 낮아진 집단은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부부들이었으며,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들도 바로 아래의 학력집단에 비해서 보다 민감하게 출산수준이 낮아졌다. 직업별로는 농업업과 단순노무직처럼 직업위세가 낮은 직종, 그리고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과 전문직 종사자의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무급 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출산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다음이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주, 상용근로자의 순서였다.

이러한 양상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부들에게 자녀수를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절실

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부들의 경우에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양육비에 대한 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의 출산수준이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부인의 순서로 높고, 직장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런 현상은 이들 직장의 안정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살펴본바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인과구조와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결과는 추후 인구학적 변화의 전망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효과적인 장단기 출산장려정책과 그 적용대상집단에 관하여 정책적인 함의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틀과 분석결과는 IMF 외환위기를 경험한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의 출산력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정책은 과거의 출산억제정책과는 달리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직 어느 선진국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의 뚜렷한 성공사례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현재 한국의 초저출산은 자기 직업의 장래나 경기회복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젊은이들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동기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 젊은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능력을 지닌 상태에서 자신의 일을 보다 중시하고 전통적인 육아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성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이들을 일찍 결혼하고 출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경기의 회복과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 한, 광범하게 정착된 저출산 지향의 사회적 규범, 가치관과 태도를 바꾸기는 적어도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아울러, 사회의 여타 부문들이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규모와 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권태환·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개정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두섭 (1986) “한국부인의 경제활동과 출산력” 인곡 황성모박사 화갑기념집
 《사회구조와 사회사상》 심설당, 759-776.

- _____ (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1(1): 23-53.
- 김두섭·송유진 (2006) 《IMF 경제위기가 한국사회의 출산수준 및 인과구조에 미친 영향》 아산사회복지재단 보고서,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 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 인구센서스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1): 1-23.
- 동아일보 (2006) “‘성격보다 직업’ 배우자 선택기준 10년 동안 이렇게 변했다” DongA.com 뉴스, 2006. 8. 5.
- 보건복지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유삼현 (2006) “지역별 차별출산력의 분석: 저출산 인과구조의 이해” 《인구와 사회》 2(2): 53-76.
- 이성용 (2006)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 29(3): 111-137.
- 통계청 (2006a) 한국통계정보시스템(KOSIS), <http://kosis.nso.go.kr/>.
- _____ (2006b) 《2005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통계청.
- _____ (2006c)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보고》 및 원자료 CD,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은행 (2006)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 한국은행.
- Blake, J. (1968) “Are Babies Consumer Durables? A Critique of the Economic Theory of Reproductive Motivation” *Population Studies* 22(1): 5-25.
- Eun, Ki-Soo (2003) “Understanding Recent Fertility Decline i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Supplement to Volume 1,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Japan, <http://www.ipss.go.jp/index-e.html>.
- Gauthier, A. and J. Hatzius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3): 295-306.
- Héran, F. (2005) “Demography and Population Policy: Is It Possible to Draw Any Lesson from the French Case?” Presented at *the KIPP (Korea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Demographic Forum* April 8, 2005 Seoul, Korea.
- IMF (2006)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Jun, Kwang-Hee (2004) "Chapter 3: Fertility" pp. 65-89 in *The Population of Korea*, edited by Doo-Sub Kim and Cheong-Seok Kim, Daejeon, Korea: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Kim, Doo-Sub (1986) "Working Experience of Married Woman and Fertility in Korea"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15: 19-30 Seoul National University.
- _____ (2005) "Theoretical Explanations of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3(1): 2-25 Tokyo: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 OECD (2004) *OECD Statistics: Labor Force*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ttp://www.oecd.org>.
-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06) 2005 *World Population Data Sheet* Washington, D.C.: Population Reference Bureau.